# 한국현대사의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5주차. 장면(2) 2강. 관치경제의 청산과 시장경제질서의 확립





- 1. 장면 정권의 경제제일주의 및 경제 질서의 정상화는?
- 2. 경제 기조의 구체적인 실천은?





- 1. 경제 기조의 선택 이유 및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.
- 2. 장면 정권의 경제 기조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하여, 그 기조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2강 관치경제의 청산과 시장경제질서의 확립





# 생각해 볼 문제



- 경제제일주의, 경제 질서의 정상화란 무엇인가?
- 왜 장면 정권은 이런 기조를 강조했는가?



#### 1] 경제제일주의

- ☑ 장면 국무총리는 민의원 시정연설에서 경제제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;
  - ➡ 과거 이승만 정권이 취해 온 관권 경제 및 불균형한 산업구조 청산
  - ➡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
  - ➡ 이 터전 위에 급속한 경제발전 성취, 복지국가 건설
- ☑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는;
  - ➡ 관치경제 청산, 자유경제 실현
  - ➡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체 운영 합리화
  - ➡ 환율, 금리 현실화 같은 혁신 정책 단행
  - → 이승만 정권이 취해 온 관치경제와 불균형한 산업구조의 숙주가 국영기업체, 환율, 금리 등의 왜곡된 가격 체계라고 본 것임



#### 1] 경제제일주의

- ☑ 관치경제 청산의 핵심은 부정축재자 처리
- ☑ 이 문제는 기업가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지연
- ☑ 장면 정권 역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축재자 처리에 미온적
- ☑ 장면은 민의원의 시정연설에서조차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
- ☑ 반면, 자유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은 적극 추진



- ☑ 장면 정권의 정상화 정책은;
  - ➡ 시장 기구를 통한 경제활동 합리화
  - ➡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경제 질서 정상화
- ☑ 그 핵심적인 방안이 귀속재산의 불하와 환율, 금리,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
- ☑ 환율, 금리,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귀속재산 불하 조치는;
  - ➡ 가격 체계의 왜곡 시정
  - ➡ 민간자본 축적의 유력한 방안
- ☑ 장면 정권은 이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음



#### 시장 기구

- 팔 사람과 살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는 기구로, 가격이 형성되는 추상적 기구
- 시장은 인격체가 아니며, 통합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을 조정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님
- 이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가격이기 때문에, 시장 기구라는 표현은 가격 기구라는 표현으로 대신 사용
-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로지 사리사욕만을 염두에 두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봄

#### 시장 기구

- 이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리사욕을 공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함
- 시장 기구는 소비자주권을 보장하고,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역할
- 하지만 시장 기구는 긍정적 측면만을 가지지 않음
- 시장 기구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1인 1표가 아닌 1달러 1표이기 때문에, 분배의 공평성의 측면에서 항상 공평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는 없음



- ◆ 귀속재산의 불하
  - ☑ 장면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;
    - ➡ 국영기업 민간 불하
    - ➡ 국영 또는 관영이라는 관치경제 잔재 청산
  - ☑ 귀속재산 운영의 주무 부서였던 상공부는 귀속재산 처리에 적극적
  - ☑ 정권 초기부터 귀속재산은 신속하게 불하



◆ 귀속재산의 불하

#### 귀속재산

 1948년 9월 11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정부에 이양된 일본인 소유였던 모든 재산을 말하며, 적산이라고도 함

- ◆ 귀속재산의 불하
  - ☑ 1960년 9월 초, 정부가 보유한 귀속재산 총 건수는 337,439건
  - ✓ 1961년 1월에는 귀속재산 총 건수가 42,692건으로 급감, 87.4%가 매각
  - ☑ 대부분의 귀속재산은 장면 내각이 들어선 직후인 9월에 집중 매각
  - ☑ 기업체, 선박, 주택, 창고 등 매각 가치가 있는 재산은 거의 다 매각



- ◆ 귀속재산의 불하
  - ☑ 귀속재산이 급속히 처분된 이유는;
  - 1 최대한 국가 소유의 재산을 불하하고 민영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론
  - 2 재정상의 요구
  - 3 장면 정권에게는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확보가 절실
  - 4 집중 매각이 이루어진 9월 귀속재산 매각으로 인한 계약고는 500억 환



- ◆ 전력 3사 통합
  - ☑ 이 문제는 국영기업의 합리화와 공공요금의 현실화 문제가 중첩된 사안
  - ☑ 국영기업체를 대부분 민영화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음
  - ✓ 전력, 석탄 등 에너지 산업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름;
    - ➡ 유솜(USOM)과 한국정부, 한국정부 내부
    - ➡ 유솜은 전력회사 통합과 민영화, 요금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권고
    - → 귀속기업체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던 주요한은 전력과 석탄에서만큼은 국영이라는 적극적인 시책을 통해 부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



◆ 전력요금 인상

- ✓ 전력 3사의 통합 방안은 마련되었지만, 요금인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음
- ✓ 유속 측은 전기요금 85% 인상안을 계속 압박, 국회는 물가 인상을 이유로 85% 인상안을 비판하였고, 여론도 악화
- ☑ 장면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요금 인상률을 49.9%선에서 결정



◆ 환율, 금리인상

☑ 공공요금, 환율, 금리 인상 조치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사항

☑ 이승만 정권부터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은;









- ◆ 환율, 금리인상
  - ✓ 환율 현실화는, 단기적으로 다양한 환율 체계를 단일 환율로 정비하는 문제
  - ✓ 장기적으로는 변동 환율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문제
  - ☑ 당시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율은;
    - ➡ 정부가 정하는 공정 환율
    - ➡ 대충자금, 외환 매각, 수출입에 적용되는 환율
    - ➡ 시장 환율, 암시장 환율 등
  - ☑ 공정 환율이 시장 환율과 괴리가 커질 때마다 미국은 환율 조정을 요구



◆ 환율, 금리인상

- ☑ 장면 정권은 우선 모든 환율을 '현실적' 단일 환율체계로 정비
  - ➡ 1월 1일에는 1000:1, 2월 2일에는 1300:1로 환율 인상
  - ➡ 단기간에 가파른 인상
  - ➡ 환율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, 이를 강행함



◆ 환율, 금리인상

- ☑ 환율 현실화 강행 이유는;
  - ➡ 민주당의 당론 + 미국의 강력한 요구
- ☑ 미국은 1000:1로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1500:1로 환율을 인상할 것을 압박
- ✓ 맥카나기 주한 미국대사도 장면 총리에게 환율 현실화를 하지 않는다면 '통화안정기금'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
- ☑ 장면 정권은 1200:1로 절충하고자 했지만, 1300:1선에서 타협



- ◆ 환율, 금리인상
  - ☑ 장면 내각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자유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음;
    - → 귀속기업체의 매각
    - ➡ 국영기업체의 민영화
    - → 공공요금 인상
    - ➡ 환율 및 금리의 현실화 작업 등
  - ✓ 이러한 조치가 관치경제를 제거하고 부정부패를 청산,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음
  - ✓ 이는 1950년대부터 다수의 지식인들이 경제개혁 조치로 언급한 사안이기도 했음



- ◆ 환율, 금리인상
  - ✓ 국내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사안;
    - → 공공요금의 인상
    - ➡ 환율 및 금리의 현실화
  - ☑ 물가와 자본축적, 수출입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
  - ✓ 그러나 장면 정권은 원조의 대가로 이들 조치를 처리하겠다는 각서 제출
  - ☑ 미국은 이를 전제로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예정



◆ 환율, 금리인상

- ☑ 공공요금 인상과 환율·금리 현실화가 미국 원조와 연동
- ✓ 이에 장면 정권은 시간적 여유와 재량권,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과의 합의 일정에 따라 정책 추진
- ☑ 결국 그에 따른 물가 인상과 경제 혼란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었음
- ✓ 이것이 경제 실책으로 이어지면서, 장면 정권은 정치적 혁명도,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



# 학습정리

- 시장 기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합리화하고,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자유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.